

『일자리행정통계』

통계정보보고서

2021. 12.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23.3.27.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일자리행정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통계작성 배경, 연혁, 통계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방법론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기획, 자료수집, 자료처리, 통계추정 및 분석,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 목 차 ◆

I. 통계개요	1
II.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5
1. 통계의 작성목적	5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6
3. 이용자 의견수렴	6
III. 통계 설계	7
1. 통계작성 기획	7
2. 수집자료의 포괄성 및 타당성	12
3. 주요 개념 및 용어	16
4. 적용 분류체계	17
IV. 자료수집	20
1. 수집자료	20
2. 자료수집체계	22
3. 수집자료 처리	23
V. 통계처리 및 분석	27
1. 통계작성 결과	27
2. 결과의 적절성	28
VI.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30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30
2. 시의성 및 정시성	33
3. 비교성 및 일관성	34
4. 접근성 및 명확성	39
5. 비밀보호 및 보안	40
VII. 통계기반 및 개선	41
VIII. 참고문헌	42

I. 통계 개요

1. 통 계 명

- 일자리행정통계 및 부속 통계 2종(임금근로일자리 소득편,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 * 이하에서 각각 소득편, 공공부문편으로 약식 표기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및 동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 통계 승인번호 제 101074호(2012.4.), 일반·가공통계

3. 통계작성방법

- 4대보험자료, 국세자료 등의 30종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종사자DB 및 기업체DB를 구축하고 이들을 서로 연계하여 일자리DB를 구축
- 무등록자료 대체(Imputation), 이상치 탐색, 수준 분석 등의 통계적 처리 과정을 거쳐 일자리 마스터테이블을 생성하고 일자리행정통계 작성
 - － 임금근로일자리 소득편 : 일자리DB에서 12월 기준 임금근로일 자리를 차지한 종사자를 추출하고 4대보험자료·국세소득 표본자료를 결합하여 통계 작성
 - －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 일자리DB에서 12월 기준 공공부문 기업체의 일 자리를 차지한 종사자를 추출하여 통계 작성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

5. 공표주기

- 1년

6. 통계작성과정 개관

일 정	과 업 명	과 업 내 용
3~5월	개선·작성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관계자 및 외부 이용자 의견 수렴 • 통계 개선 및 작성 계획 수립
6~9월	원 행정자료 인수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보험자료(매월), 국세자료(6~9월) 입수 • 원 행정자료에 대해 단위·항목 결측 여부 등 기초적 내용 검토 실시
10월	종사자DB 및 기업체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종사자DB 및 기업체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DB) 사업장, 근로기간, 성별·연령 등 근로정보를 사업자등록-개인 단위로 DB 구축 - (기업체DB) 기업종류, 산업분류, 종사자규모, 기업규모 등 기업체정보를 기업체-사업자등록 단위로 DB 구축 • DB별 내용 및 시계열 안정성 점검
11월	일자리DB 구축 및 데이터 에디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DB와 기업체DB를 연계, 기업체 단위의 일자리DB를 구축하고 일자리 규모를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의 근무기간, 사업장 등을 기업체 단위로 정리 • 무등록자료 대체, 이상치 탐색 등 데이터 에디팅
12월	일자리행정통계 작성 및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항목별 자료 집계 및 수준분석 • 보도자료 작성 및 통계 공표 • KOSIS 통계표 업데이트(1개월 이내)
(익년) 1월	공공부문편 작성 및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일자리 추출 • 분류·항목별 자료 집계 및 수준분석 • 보도자료 작성 및 통계 공표 • KOSIS 통계표 업데이트(1개월 이내)
2월	소득편 작성 및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항목 정리 및 일자리DB에 연계 • 분류·항목별 자료 집계 및 수준분석 • 보도자료 작성 및 통계 공표 • KOSIS 통계표 업데이트(1개월 이내)

7. 통계연혁

① 작성 배경

- 글로벌 금융·재정 위기에 따라 취업·실업 등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파악하는 통계는 부족한 실정
-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 통계는 기업체의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전국사업체조사 등 사업체 중심의 조사는 종사자 정보가 취약
-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장과 종사자를 통합하고 일자리를 파악하는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가 제1차 중기행정자료 활용전략(2011~2015)의 단기 과제로 선정

② 개발 과정 및 변경 이력

-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 개발계획 검토 및 확정 : 2011.10.
-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 작성 승인 : 2012.4.
- 2010년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 공표(최초) : 2012.6.
 - 12월말 기준으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상으로 작성
- 2011년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 공표 : 2012.12.
- 2012년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 공표 : 2013.12.
- 2013년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 공표 : 2014.11.
- 2014년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 공표 : 2015.11.
- 2015년 기준 일자리 행정통계 공표 : 2016.12.
 - 작성대상을 일용근로 및 비임금근로 일자리까지 확대하고, 기준시점은 12월 한달간으로 변경

－ 일자리 지표 체계 세분화

※ 일자리 지표

- 기존: 지속일자리 + 신규채용일자리(기업체생성, 기업내신규대체)
- 개선: 지속일자리 + 신규채용일자리(대체일자리, 신규일자리-기업체생성/사업확장)
소멸일자리(기업체소멸, 사업축소)

－ `15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최초 작성 : 2017.6.

－ `15년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분포 기획 보도 : 2017.6.

○ 2016년 기준 일자리 행정통계 공표 : 2017.11.

- －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분류를 적용하여 기업규모 항목 작성
- － 산업분류 공표수준을 대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
- － `16년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편 최초 작성
- － `16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공표 : 2018.2.

○ 2017년 기준 일자리 행정통계 공표 : 2018.12.

- － 작성 범위를 12월 일자리에서 연간 일자리로 개편
-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반영
- － `17년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편 공표 : 2019.1.
- － `17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공표 : 2019.2.

○ 2018년 기준 일자리 행정통계 공표 : 2019.12. 소득편(`20.1) 공공부문(`20.2)

○ 2019년 기준 일자리 행정통계 공표 : 2020.12. 소득편(`21.2) 공공부문(`21.1)

○ 2020년 기준 일자리 행정통계 공표 : 2021.12. 소득편(`22.2) 공공부문(`22.1)

○ 2021년 기준 일자리 행정통계 공표 : 2022.12. 소득편(`23.2) 공공부문(`23.1)

II.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① 추진배경

- 고용 없는 저성장, 청년실업 증가 등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통계 수요 급증
- 행정자료 활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 및 언론)와 공감대 형성(응답부담 감소, 어려운 조사환경 극복 및 비용절감 등)

② 작성목적

- 질 좋은 일자리가 공공·민간부분에서 창출되어 고용증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계 개발·제공
- 좋은 일자리*(decent work) 창출을 위해 양적 규모 외에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대한민국 ‘고용의 질’ 지표)
 - * 국제노동회의(ILO)에서 ‘좋은 일자리’ 개념 선언(1999년)
 - ** 고용의 안정성, 수입과 복지혜택, 근로조건, 사회적 보호, 일과 삶의 조화 등

③ 활용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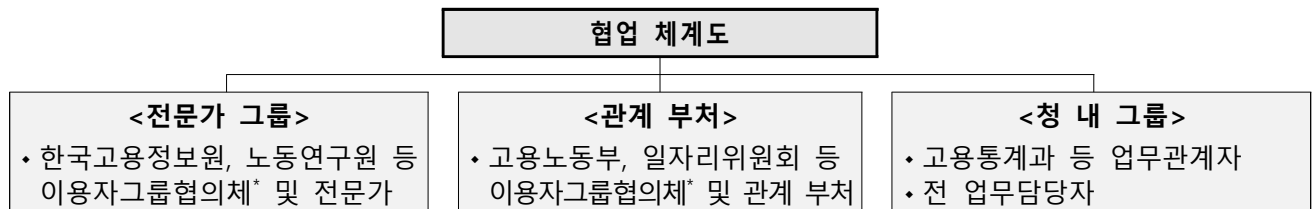
-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체계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맞춤형 통계 제공
 - － (일자리정책 로드맵) 일자리 상황판 지원 등 통계기반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 － (국정과제) 세분화된 기업관련 통계 개발 등 중소기업 육성 정책 지원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공공·민간 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통계로 활용
 - －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및 추세 분석에 필요한 신규 통계 개발(’17. 6월 최초 공표)을 통해 일자리 창출 추진력 확보
- 정부, 국회 및 공공기관, 학계, 민간기관, 연구소 등에서 일자리 관련 정책 평가 및 분석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활용기관	활용유형	정책(연구)명	주요 활용 데이터	주요 활용 내용
기획재정부	정책수립	일자리창출정책 수립	기업규모, 산업별 일자리 수 및 근로소득	일자리(노동)정책 수립·효과분석·평가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정책수립	정부조직 일자리 현황 및 개혁	공공부문별 일자리 수	-공공부문 일자리 추세 분석 -공공부문 개혁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고용노동부	정책수립 및 연구	-고용(노동)정책 수립 -기업의 일자리 창출지수 심층 분석 연구	산업별 일자리 수	고용(노동)정책 수립·효과분석·평가, 국내기업의 일자리 분석
교육부	정책수립	취업지원정책	연령별, 산업별 일자리 수	취업지원정책 수립·효과분석·평가
보건복지부	정책수립	사회서비스정책	산업별 일자리 수	사회서비스정책 수립·효과분석·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중소기업 일자리정책	중소기업 일자리 수	중소기업의 일자리정책 수립·효과분석·평가
일자리위원회	정책수립	통계기반 일자리 정책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산업별 일자리 수	일자리정책 수립, 집행, 평가 및 환류

3. 이용자 의견수렴

- 일자리행정통계 개발 및 개선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 국회, 관련부처, 전문가의 추가 개선 요구사항 검토
- 시산 결과 검토에 대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 개최



* 이용자그룹협의체

-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최근 3년간 5개 관계부처, 4개 외부전문기관, 15명, 10회 운영)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전문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 통계수요 발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자문과 통계 작성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함

Ⅲ. 통계 설계

1. 통계작성 기획

① 기본 개념

○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을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즉 임금근로자로 정의되나, 본 통계에서는 비임금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 근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
- 임금근로자란 개인, 가구, 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등을 받는 사람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임시·일용근로자로 구분되며, 임금근로자 외에는 자신 또는 가족의 수입을 위해 일한 사람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상용근로자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적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한 사람
- 임시근로자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의 완료를 위해 고용된 사람
- 일용근로자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단위로 고용된 사람
- 독자적인 사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 종속되지만 스스로의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특수형태근로자(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도 있는데 이들은 임금·비임금 성격을 동시에 지님
-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ILO 매뉴얼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만 15세 미만과 (직업 군인, 상근예비역 제외한) 징집된 군인, 사회복지요원, 의무경찰, 형벌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특수 인구 집단은 생산가능인구로 보지 않음
- 또한 무급 가사노동, 무급 훈련활동 등 급여를 발생시키지 않는 활동이나 법률에 의해 강제된 노역·봉사활동 및 주식·채권 등을 단순 보유만 하고 기업의 경영이나 운영에 기여하지 않는 활동은 조사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으로 보지 않음
- 본 통계에서는 생산가능인구(연령 기준은 미적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않음

○ 기업체

- 기업체는 재정과 투자의 결정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재화·용역을 생산하기 위한 자원의 배분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경제적 행위자(UN, 「국제표준산업분류」)

- 기업체는 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법적·제도적 최소 경영 단위이며,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단일 혹은 복수의 사업체로 구성(통계청, 「통계표준용어」)
- 소유주 형태에 따라 법인 기업체와 개인 기업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통계에서는 법인의 경우 출자·지분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상 법인에 종속된 사업장만 동일 기업체로 간주하고, 복수의 사업을 하는 개인은 사업 집단 전체를 하나의 경영 일체로 보아 동일 기업체로 간주

< 법인과 개인 기업체의 판단 예시 >



② 일자리행정통계 작성 대상

○ 작성 단위 : 일자리

- 일자리란 근로자에 의해 채워진 고용 위치("A job is an employment position filled by a worker", Davis et al, 1996,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 한 개인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련의 업무 및 과업("A job is defined as a set of tasks and duties performed, or meant to be performed, by one person for a single economic unit.", ILO,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18)」)
- 일자리는 물리적 실체를 가지는 취업자와 다른 추상적 개념("고용 위치" 혹은 "일련의 업무 및 과업")으로, 기업체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에 의해 일자리가 점유됨으로써 파악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복수의 경제활동을 하였더라도 한 명의 취업자로 파악하나, 일자리 측면에서는 각 경제활동별로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력(근로기간)을 통해 일자리의 크기를 산정
- 한 개인이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학원 강사를 부업으로 한 경우 취업자는 한 명이지만 일자리 측면에서는 각 기업체(회사, 학원)에 존재하는 ○개의 일자리로 파악

○ 포괄 범위 :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가 점유한 모든 일자리

○ 기준 시점 : 기준년도에 하루 이상 근무한 자의 일자리를 모두 포함

③ 공공부문편 작성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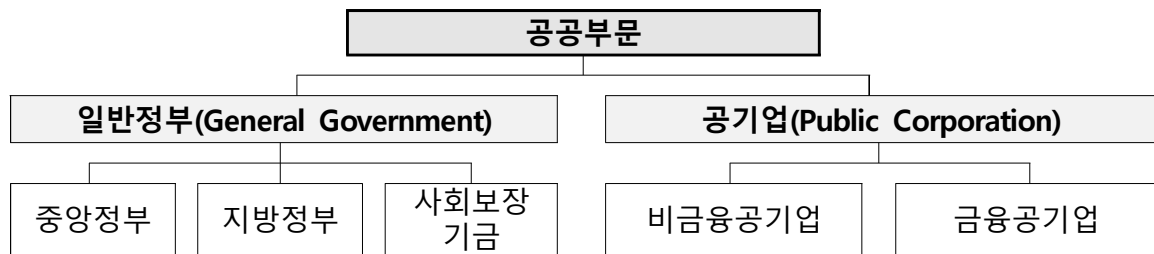
○ 작성 단위 : 일자리

○ 포괄 범위 : 전체 일자리 중 SNA(UN, 2008)에 따라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성 되는 공공부문 기업체의 일자리를 포괄

－ (일반정부) 중앙·주·지방 정부 혹은 그와 같은 조직체에 의해 지배받는 비시장적 비영리단체

- 중앙정부 : 부·처·청 등 중앙정부 조직체와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공비영리단체
- 지방정부 : 지방정부의 조직체와 지방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공비영리단체
- 사회보장기금 :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의 기금을 관리하는 조직체

－ (공기업) 정부의 지배(주로 정부 소유)를 받으면서 시장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단위



○ 기준 시점 : 12월에 하루 이상 근무한 자의 일자리만 포함

④ 소득편 작성 대상

○ 작성 단위 : 일자리

－ “일자리 소득”은 기업체에서 하나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전가치, 즉 비용에 가까운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기업체에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이해되는 소득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 근로자 및 일자리별 주당 소득(비용) 산정 예시 >

근로자	근무일							근로자 단위		일자리 단위	
	1	2	3	4	5	6	7	명수	주당 소득	개수	주당 비용
김○○	정규 근무							1명	65만원	1개	65만원
이●●	비정규 1							1명	10만원	1개	35만원
박◎◎			비정규 2					1명	10만원		
최◇◇					비정규 3			1명	15만원		
총 계								4명	평균 25만원	2개	평균 50만원

－ 소득에 대한 일반적 이해에 부합하도록 작성 단위를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를 차지한 근로자로 설정, 근로자가 해당 일자리를 차지하면서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를 작성

○ 포괄 범위 : 임금근로일자리

○ 기준 시점 : 12월에 하루 이상 존재

⑤ 일자리행정통계 및 공공부문편 작성항목 : 일자리 수(개)

○ 개념 정의 : 기업체에서 근로자가 일한 근로기간(혹은 근로일수)을 이용하여 계량한 일자의 크기

- 근로자가 기업체에서 점유한 일자의 크기는 작성 기준 연도에 근무한 기간을 해당 연도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산정 (251일/365일=0.68493...개 일자리)
- 업무량이나 고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FTE(full time equivalent)*와 유사한 방법이나,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알 수 있는 행정자료는 매우 한정적이어서 근무기간을 이용하여 일자리 산정

<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4인의 1주 기준 일자리 수 산정 예시 >

근로자	근무일							일자리수
	1	2	3	4	5	6	7	
김○○	정규 근무							7/7개
이●●	교대 근무 1							2/7개
박◎◎			교대 근무 2					2/7개
최◇◇					교대 근무 3			3/7개
총 일자리 수								2개

○ 포괄 범위 : 기업체에 의해 근로자가 채용되어 당해 1월 1일 혹은 근무시작일자부터 당해 12월 31일 혹은 근무종료일자까지의 연중 근무일수를 모두 포함

○ 기준 시점 : 연중

⑥ 소득편 작성항목 : 소득(보수)

○ 개념 정의 : 소득(보수)은 일자리를 차지한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은 반대 급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과 개념상 유사

○ 포괄 범위 :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세전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포함
- 다만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학자금, 식대,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의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기준 시점 : 12월 일자리를 차지한 근로자의 기준년도 월평균 소득

- 정기·특별상여금은 주기적으로 혹은 특정 월에 지급되기 때문에 특정 월의 소득을 작성 할 경우 과소·과대 추정이 발생할 수 있어 연간 총 급여를 월평균으로 환산
- 12월 기준 근로일수가 31일이 아닌 일용근로자 등은 연간 급여 총액으로 평균일급을 계산한 후 12월에 일한 일수만큼 곱하여 계산

㉗ 자료의 시의성 및 수집 가능성

○ 본 통계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행정통계로,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은 행정자료 보유기관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여부 및 구축 주기·시기에 종속

- 행정자료란 통계자료 이외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DB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통계법 제3조), 통계청은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통계법 제24조)

○ 4대보험자료(국민·건강·고용·산재), 국세자료, 직역연금자료(공무원·사학 등) 등을 포함한 총 27종의 행정자료 활용

- 각 자료는 소관 기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고유한 입수 주기 및 시점을 가지고 있고 국세자료는 연 단위로 신고·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자료의 기준 시점과 입수 시점의 차이가 다소 있으나, 연간 통계 작성 기준으로는 무리가 없는 수준임

○ 행정자료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① 행정서식, 행정행위 등을 단순히 목록화한 파일이 아니라 표준적인 방식으로 구축한 DB가 필요하며 ② 그 DB는 통일된 개체 식별번호체계를 따라 작성되어야 함

- 통계청에서는 2006년에 도입된 I-PIN을 이용, 행정자료 상 주민등록번호를 역변환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가명화하여 입수하고 있으며, 입수된 행정자료의 적재·접근·처리를 위한 원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문제를 해소하고 있음

○ 공공부문편 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지정현황자료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현황자료 등을 활용하여 DB로 구축

2. 수집자료의 포괄성 및 타당성

① 4대보험의 법률적 적용 범위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소재지가 일정치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무보수 법인 이사, 1개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시간강사는 제외)는 가입 대상 근로자로 보지 않음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 및 공무원·교직원
 - 의료급여법, 독립유공자예우법, 국가유공자지원법 등에 따라 의료급여나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미대상
 -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임용 하사 포함), 전환복무자, 군간부후보생, 무보수 선출직 공무원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 예외적으로 아래 사업들은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미적용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소면적의 건축·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단시간근로자 제외(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포함)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스스로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산재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예외 없이 적용
- 4대보험의 근로자 포괄성 : 4대보험 전체를 통합하여 보았을 때는 임금근로자 모집단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으나 비임금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자는 상당 부분 배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용·단시간 근로자를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까지 포괄

- 국민연금은 퇴직연금의 성격이 있어 직역연금 가입자나 수급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고연령층을 가입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다른 4대 보험에서도 국가 간 상호주의에 의하거나 체류자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가입 가능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자, 사업장이 일정하지 않은 사업, 특수형태근로자 등은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 산재보험에서는 법령상 열거된 특수형태근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

② 직역연금의 법률적 적용 범위

- 공무원연금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은 대상이 되며, 군인과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선출직 공무원 등은 제외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설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등도 가입
- 사학연금 : 학교법인,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그 밖에 사인이 설치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각종 대학 등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교원과 해당 학교의 사무·운영 등을 위해 고용된 교직원은 가입 대상
 -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제외
- 군인연금(퇴역연금) : 법령 자체는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모두 적용되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병(兵), 군간부 후보생 등은 퇴역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며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만 적용
- 별정우체국연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하며, 별정우체국연금은 해당 직원(국장은 제외)을 대상으로 함

③ 국세 관련 신고 서식의 법률적 범위

- 지급명세서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법인, 사업자, 국가 등)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
-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일용근로자로 보며, 건설·하역작업에서 지휘·감독 및 기계장비의 운전·운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고용된 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음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저술가·작곡가 등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인적 용역의 대가(부가가치세가 면제)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세무신고가 종결되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① 보험모집인 ② 방문판매원 ③ 음료배달원 중에서 간편장부 대상자(연수입 7500만원 미만)가 받는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 사업자란 사업의 영리성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단, 사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추가로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사업장마다 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세율 10%)를 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소득세법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 동안의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납부를 한 자는 사업장현황을 신고한 것으로 봄
- 사업소득신고 :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함
- 다만 업종·규모 등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

- 법인세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내국법인 중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란 아래와 같으며, 이들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님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즉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④ 4대보험자료·직역연금자료·국세자료의 근로자 포괄성 검토

- 본 통계는 활용 가능한 4대보험·직역연금·국세자료를 모두 통합하여 각 제도마다 존재하는 사각지대들을 제거하고 근로자 모집단을 최대한으로 포괄하여 작성하므로 전수통계로서의 의미가 있음
- 다만 4대보험과 국세신고 대상이 아닌 무급가족종사자와 소규모 자영 농림어업 및 가구내고용활동 종사자는 행정자료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므로 본 통계에서 포괄하지 못함

⑤ 근로자 수의 통계적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

- 4대보험·직역연금·국세자료 등은 행정기관에 DB형태로 구축되는 자료로 개별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매우 높은 편으로, 특히 4대보험과 국세자료의 경우 소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하여 통계를 공표하고 있으며 시계열 안정성이 높음

3. 주요 개념 및 용어

① 일자리 지표 정의

- ① 지속일자리 : 당해 연도와 전년도에 걸쳐 동일 기업체 내에서 동일한 근로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점유된 경우
- ② 대체일자리 : 당해 연도에 기업체에서 퇴직하였거나 타 기업체로의 이직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
- ③ 신규일자리 : 당해 연도에 기업체 생성이나 기업 내 사업 확장으로 새로 생긴 일자리
 - ③-1 기업체생성 : 법인 또는 사업체 설립 등 조직 생성에 의해 새로 생긴 일자리
 - ③-2 사업확장 : 동일 기업체 내에서 사업 확장에 의해 새로 생긴 일자리
- ④ 신규채용일자리 : 당해 연도에 이직·퇴직 발생하였거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②+③)
- ⑤ 소멸일자리 : 당해 연도에 기업체 소멸이나 기업 내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
 - ⑤-1 기업체소멸 : 기업체 폐업 등으로 사라진 일자리
 - ⑤-2 사업축소 : 동일 기업체 내에서 사업 축소 등으로 사라진 일자리
- ⑥ 일자리증감 : Σ 신규일자리 - Σ 소멸일자리

② 소득 지표 정의

- 평균소득 : 총 소득의 합을 전체 개체 수로 나눈 값
- 중위소득 : 개체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 중앙에 위치한 개체의 소득

4. 적용 분류체계

① 근로자 관련 분류

- 성 : 일자리를 차지한 근로자의 생물학적 성
- 연령 : 일자리를 차지한 근로자의 연앙(7.1.) 기준 만나이
 - 12월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편과 공공부문편은 연말(12.31.) 기준으로 계산
- 근속기간 : 근로자가 해당 기업체의 일자리를 차지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연수
- 종사상지위 : 일자리를 차지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지위 상태

< 종사상지위 분류값 및 정의 >

분류값 이름	정의
임금근로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사업체)에서 현물 또는 현금을 대가로 상품생산이나 서비스 활동을 하는 근로자(인적단위)가 점유한 고용위치 ·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의 일자리가 포함 · 일자리행정통계에서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 이상 3종의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 임금근로 일자리로 분류
비임금근로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가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나 자기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점유한 고용 위치 ·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일자리가 포함

- 소득구분 : (12월) 일자리를 차지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보수)의 구간값

② 기업체 관련 분류

- 기업종류 : 기업체를 경영하는 주체의 법적 조직형태

< 기업종류 분류값 및 정의 >

분류값 이름	정의
회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에 의하여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법인격을 갖춘 조직체 ·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회사이외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에 의한 재단·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 ·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일자리가 포함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통치기구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국공립학교 등
비법인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격이 없는 각종 단체나 모임 · 동호회, 동창회, 후원회, 종친회, 입주자대표회 등
개인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1인 또는 공동으로 경영하는 기업체 · 자영업자 등 일반 개인사업자의 기업체

- 종사자규모 : 기업체가 조업기간 안에 평균적으로 고용했던 종사자 수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을 차용하여 해당 기업체가 기준년도 매월 말일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조업개월수로 나누어 산정
- 산업분류 :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며, 산업분류는 생산단위(여기서는 기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유형화 한 것임(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 영리구분 및 기업규모 : 중소기업법에 따른 영리·비영리 및 대기업·중소기업 분류
 - SNA의 비영리단체(NPIs)란 생산활동은 흑자나 적자를 발생시키지만 흑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잉여는 다른 제도단위에게 배분되지 않는 제도 단위를 말함
 -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즉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 중소기업법에서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설립 목적도 감안하여 비영리성을 판단하여 아래 열거되는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 비영리기업으로 간주
 - 농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대한염업조합, 의료법인, 산학협력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또한 중소기업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업종별 규모(매출액) 기준, 자산 상한 기준,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매출액은 기준년도 직전 3년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산정
 - 본 통계에서는 업종별 규모(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을 판단

< 영리구분 및 기업규모의 분류값 및 정의 >

분류값 이름	정의
영리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며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조직
대기업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법상 규모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으로 판단한 기업체
비영리기업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등 이익 배분을 하지 않는 비영리목적의 조직

○ 공공부문 분류 : SNA(UN, 2008)에 따른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성

< 공공부문 분류의 분류값 및 정의 >

분류값 이름	정의
일반정부	공공비영리단체를 포함 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
중앙정부	부·처·청 등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공비영리단체로 구성
지방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공비영리단체로 구성
사회보장기금	정부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
공기업	정부의 지배를 받으면서 시장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단위
비금융공기업	중앙비금융공기업과 지방비금융공기업으로 구성
금융공기업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

○ 정부기능 분류 : IMF,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에 따른 분류로, 일반 정부 단위가 다양한 종류의 지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사회·경제적 목표에 대한 분류

< 정부기능분류의 분류값 및 정의 >

분류값 이름	정의
일반 공공행정	행정 및 입법기관, 금융 및 재정, 국외업무, 해외 경제원조, 일반 서비스, 기초연구, 일반 공공행정 R&D, 기타 미분류 일반 공공행정, 공공 채무 거래, 정부간 일반 이전
국방	군사 방어, 민방위, 해외 군사원조, 국방 R&D, 기타 미분류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서비스, 소방서비스, 법원, 교도소, 공공질서 및 안전 R&D, 기타 미분류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활동	일반 경제, 상업, 노동,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연료 및 에너지, 광업, 제조, 건설, 운송, 통신, 기타 산업, 경제 R&D, 기타 미분류 경제
환경보호	폐기물 관리, 폐수 관리, 공해 방지, 생물 다양성 및 경관 보호, 환경보호 R&D, 기타 미분류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주거시설 개발, 지역사회 시설개발, 수도 공급, 가로등,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R&D, 기타 미분류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보건	의료제품, 기기, 장비, 외래 환자서비스, 병원서비스, 공공 보건서비스, 보건 R&D, 기타 미분류 보건
휴양, 문화, 종교	휴양 및 스포츠 서비스, 문화서비스, 방송 및 출판서비스, 종교 및 기타 공동체 서비스, 휴양, 문화, 종교 R&D, 기타 미분류 휴양, 문화, 종교
교육	유아 및 초등교육, 중등교육, 2차 중등교육, 고등교육, 등급 외 교육, 교육 보조 서비스, 교육 R&D, 기타 미분류 교육
사회보호	질병 및 장애, 노령, 유족, 가족 및 자녀, 실업, 주거,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사회보호 R&D,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

* 각 분류항목의 세부적인 분류값은 『VI.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의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을 참조

Ⅳ. 자료 수집

1. 수집자료

① 수집자료별 대상·주기·형태

자료 구분	행정자료명	세부자료명	주기 및 시차	대상
4대 보험 자료	국민연금자료	사업장가입자	월(3개월)	당월 자격유지자
		퇴직자	월(3개월)	당월 자격상실자
		사업장	월(3개월)	당월 적용사업장
	건강보험자료	직장가입자	월(3개월)	당월 자격유지자 및 자격상실자
		사업장	월(3개월)	당월 적용사업장
	고용보험자료	피보험자	월(3개월)	당월 피보험자
	산재보험자료	-	월(3개월)	당월 적용사업장
직역 연금 자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월(3개월)	당월 고용·산재 일용근로자
	공무원연금자료	-	년(10개월)	연말 공무원 및 수급자
	사학연금자료	-	년(10개월)	연말 사학교직원
	군인연금자료	재직자	년(10개월)	연말 군인
		퇴직자	년(10개월)	연중 수급자
국세 자료	별정우체국연금자료	-	년(10개월)	연말 별정우체국직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년(6개월)	연중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수자료	분기(6개월)	매월 일용근로자
		소득표본자료	년(12개월)	12월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말)	전수자료	년(6개월)	연중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소득표본자료	년(12개월)	12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원천)	-	년(6개월)	연중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자료	-	월(1개월)	연중 사업자등록
	사업자단위사업장자료	가동	월(1개월)	연중 가동 사업자단위사업장
		폐업	월(1개월)	연중 폐업 사업자단위사업장
	공동사업자자료	-	월(1개월)	당월 공동사업자
	법인합병신고서	-	년(8개월)	연중 합병·피합병 법인
	사업장현황신고서	-	년(4개월)	연중 면세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자료	-	년(8개월)	연중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
	법인세자료	-	년(9개월)	연중 소득이 있는 법인
기타 자료	사업소득신고자료(복식)	-	년(10개월)	연중 복식기장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신고자료(간편)	-	년(10개월)	연중 간편장부 사업소득자
	법인등기자료	-	년(9개월)	연중 등기된 법인
	여신금융협회가맹점자료	-	월(3개월)	당월 카드매출사업자
	공공기관 현황자료(자체)	-	년(10개월)	연중 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자료(자체)	-	년(10개월)	연중 지방출자출연기관
	학교 현황자료(자체)	-	년(10개월)	연중 전국학교

② 수집자료의 합목적성 검토

- 자료의 형태면에서 일자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짝지어진 데이터 (Linked Employer-Employee Data, 이하 LEED)와 그러한 관계 하에서 노동이 투입된 시간·일수 혹은 기간을 알 수 있어야 함
- 고용주가 근로자의 소득 중 일부를 소득세, 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해 원천징수하는 각종 납세 및 사회보험제도들은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사업장관리번호로 고용 중인 근로자의 명부와 관련 내용을 신고하므로 형태면에서 LEED의 성격을 갖추고 있음
- 4대보험, 국세 등의 행정신고는 관련 법·제도나 사업자의 사업양태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다양한 단위를 기반으로 이뤄지므로 이들을 단일한 통계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 사업체-기업체 관계 테이블이 필수적임
 - 4대보험자료, 사업자등록자료 등에서 입수되는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들을 최상위 식별번호로 묶어 기업체를 구성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함
 - 공공부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정부부처 및 기타 조직체들을 수작업으로 식별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하나의 기업체로 구성
- 결과적으로 수집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 명부와 기업체-사업장 관계 테이블을 각각 생성하고 이들을 상호 연계하여 기업체 단위의 LEED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함

③ 수집자료의 한계점

- 일용근로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대신 월별 근무일수가 입력되므로 자료의 통합과 근로자 명부 생성을 위해서 월별 근무일수를 근무기간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함
- 공공기관·지방출자출연기관·학교 현황자료는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사업장명만으로만 구성되므로 공공부문 식별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찾아주는 작업이 필요
- 입수되는 행정자료는 행정기관이 DB로 구축한 자료들이나, 일부 레코드에서는 항목 무응답이나 오입력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 자료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처리(에디팅 혹은 임퓨테이션)가 필요함

2. 자료수집 체계

① 자료수집의 과정과 방법

- 본 통계에서 활용하는 4대보험·국세·지역연금 자료는 통계법에 따른 행정자료로서 동법에 규정된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조항들을 준용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짐
- － 자료가 입수될 때에는 행정정보공동중계시스템을 경유하며, 입수된 자료의 주민등록번호는 역변환이 불가능한 방식(I-PIN 활용)으로 암호화하여 DB로 적재

< 행정자료 입수 절차 개요 >

업무절차	업무내용	소관부서
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사와 대상 수요조사 ■ 정기/수시 수요조사 ■ 자체 발굴 병행 	행정자료관리과
↓		
입수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수대상 행정자료 선정 ■ 입수전략 ■ 입수일정 	행정자료관리과
↓		
입수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수대상 행정자료 이해 ■ 입수대상 항목 세부 수요조사 ■ 단계적 입수협의 	행정자료관리과 또는 해당부서
↓		
입수 및 DB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수즉시 DB구축 ■ DB구축 내용검토 ■ 활용지원 	행정자료관리과 조사시스템관리과

② 자료수집 관련 법·제도적 장치

- 통계법 제3조(정의) 및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통계법 시행령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은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명시해야할 내용에 대해 규정

통계법 시행령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 행정자료의 명칭
3.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
4. 행정자료의 내용(성별로 구분되는 행정자료의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된 내용을 말한다)과 범위
5.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6. 행정자료의 제공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1항제1호에서 통계법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적용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법 시행령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은 통계청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통계법 시행령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수집자료 처리

① 기업체-사업장 관계 테이블 생성

- ①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모집단 생성
- ②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정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본점-법인등록번호 관계 정의
- ④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법인등록번호 관계 연계
- ⑤ 법인성격코드 및 피합병 여부 연계
 - 당해 법인등기자료에서 법인등록번호별 법인성격코드를 연계하고 법인합병신고서에서 존속(합병)법인등록번호를 연계

⑥ 공공부문코드 연계

⑦ 기업체번호 부여 및 기업체종류·영리구분 항목 생성

- 공공부문코드(a~e)-법인등록번호-본점사업자등록번호-사업주식별번호-사업자등록번호 중 최상위 식별번호로 기업체를 식별하기 위한 기업체번호 부여
- 동일 소유인의 사업자등록번호들은 하나의 기업체로 판단
- 공동사업자인 경우 별개 기업으로 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업체번호로 부여
- 기업체번호의 식별번호 종류에 따라 기업체별 기업체종류 및 영리구분 결정

⑧ 산업분류코드 연계

-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자료, 비영리사업자 자료 3종 자료의 산업분류 코드를 사업자등록별로 연계

② 근로자DB 구축

① 4대보험 가입자 자료 정비

② 4대보험 사업장 자료의 비임금근로자 구분

- 법인 기업체에서는 비임금근로자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의 4~5번째 자리가 01~79 혹은 90~99인 개인기업체의 비임금근로자만을 추출

③ 국세자료의 근로자 정보 정비 정비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④ 국세자료의 비임금근로자 자료 정비

⑤ 4대보험·국세자료 통합

③ 기업체 항목 테이블 생성

① 존속기간 항목 생성

- 소속 사업자등록의 개업일자·폐업일자로 기업체의 존속기간 산정

② 매출액 항목 생성

- 연도별(T-3년 ~ T년, 4개년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신고(복식/단순), 사업장 현황 자료의 매출액을 사업자등록단위로 연계하고 매출액 산정

③ 자본금 항목 생성

④ 활동기간 및 종사자규모 등 항목 생성

- 기업체 단위로 소속 근로자의 활동일수, 활동개월수를 집계한 후 기업체의 활동일수, 활동개월수를 이용하여 일자리규모·종사자규모 계산
- 일자리규모 : 기업체에서 일한 근로자의 당해 근로일수의 총합을 기업체의 활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 종사자규모 : 기업체에서 일한 근로자의 당해 월말일 근로횟수의 총합을 기업체의 활동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

⑤ 산업분류 항목 생성 및 임putation

- 영리기업체는 매출액을, 비영리기업체는 종사자규모를 기준으로 TOP-DOWN 방식으로 당해 기업체 산업분류 잠정 결정
- T-2, T-1년의 기업체 산업분류를 확인하고 안정성 규칙을 검토한 후 결정

※ (참고) 안정성 규칙(stability rule, 국제표준산업분류) 복수의 산업활동을 하는 기업체의 내적 구성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일부가 조금만 변해도 주된 산업활동이 바뀔 수 있는 경우, 산업분류가 지나치게 자주 바뀌지 않도록 2~3년 동안의 산업활동을 감안하여 산업분류를 결정한다는 규칙

⑥ 기업규모 항목 생성

- 기업체별 직전 3개년도 매출액과 산업분류코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여부 판단

④ 일자리DB 구축

- 종사자DB에 기업체 항목 연계

⑤ 소득항목 정리 및 연계

- 사회보험 및 국세자료에서 소득항목 연계
- 기업체_근로자별로 보수총액, 근무일수 등을 이용하여 월평균보수 산정
- 자료별 극단이상치를 점검

⑥ 공공부문 일자리DB 구축

① 중앙·지방정부 자료 생성

- 4대보험 및 국세자료에서 4~5번째 자리가 83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추출 (외국대사관 및 미군부대는 제외)

< 중앙·지방정부의 공공부문코드 부여 체계 및 예시 >

구 분	코드 분류	일련번호	예시
중앙정부	행정부	직제순	a101
	사법부	직제순	b101
	입법부	직제순	c102
	학교(국립)	1+학교구분코드(2자리)	e110
지방정부	기초	행정구역번호(4자리)	d4567
	광역	행정구역번호(2자리)	d46
	교육청	행정구역번호(2자리)	e23
	학교(공립)	2+학교구분코드(2자리)	e210

② 공공기관 자료 생성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안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지방자치 단체를 분류

< 중앙·지방정부의 공공부문코드 부여 체계 및 예시 >

구 분	공공기관 형태	공공부문코드
중앙정부	공공비영리단체	f
지방정부	공공비영리단체	g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체	h
비금융공기업	중앙	i
	지방	j
금융공기업	중앙	k

③ 지방 출자·출연기관 자료 생성

※ (참고) 출연기관 정부가 출연금 예산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
출자기관 정부가 자본금의 50%미만을 출자한 법인 또는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

- 행정안전부 출자·출연기관 목록의 사업장명을 이용하여 행정자료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를 검색·추출한 후 목록화하고 공공부문코드를 부여

<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공공부문코드 부여 체계 및 예시 >

구 분	공공기관 형태	공공부문코드
지방정부	공공비영리단체(출연)	lg
비금융공기업	지방(출자)	mk
	지방(출연)	lk

④ 공공부문자료 통합 및 단위 정비

⑤ 공공부문 일자리DB 구축

V. 통계처리 및 분석

1. 통계작성 결과

① 일자리행정통계(공공부문편 포함) 산출 과정

- 신생·소멸 기업체 파악 및 소유·지배 관계 보완 : T-1년과 T년의 기업체-사업장 관계 테이블을 연계하여 신생·소멸 기업체를 구분하고 사업장의 소유·지배 관계 변화를 파악하여 기업체 번호 보완
 -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는 상속이나 공동사업의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명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를 식별하여 연도별 기업체번호를 연결
 - 법인에 소속된 사업자등록 중 지배 관계가 연도별로 바뀐 것에 대하여 종사자규모가 일정 이상인 경우를 추출하여 인수·합병 여부를 검증 후 연도별 기업체번호 연결
- 일자리 형태 지표 작성 : T-1년과 T년의 일자리 DB를 기업체번호 및 개인식별번호를 연계키로 연계하여 일자리의 지속성을 판단하고 일자리 형태 지표 작성
 - 지속일자리 : 기업체 내에 동일 근로자가 T-1년에 이어 T년에도 점유한 일자리
 - 대체일자리 : 기업체 내에 T-1년과 T년 사이에 이·퇴직이 발생하여 다른 근로자에 의해 대체된 일자리
 - 신규일자리 : T년에 신규로 생성되어 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
 - 기업체생성 : T-1년에 없었으나 T년에 새로 생긴 기업체의 일자리
 - 사업확장 : T년에 사업이 확장된 기업체의 신규 일자리
 - 소멸일자리 : T년에 소멸된 일자리
 - 기업체소멸 : T-1년에 있었으나 T년에 소멸한 기업체의 일자리
 - 사업축소 : T년에 사업이 축소된 기업체의 신규 일자리

② 소득편 산출 과정

- 무등록 조정 가중치 적용 : 소득편 작성 대상이 되는 12월의 상용·임시 근로자 중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해 소득액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가 있으므로 결측이 아닌 개체에 무등록 가중치 부여
- 성, 연령, 근속기간, 기업규모, 기업종류, 산업(대)분류 등의 활용 가능하고 공표 대상이 되는 모든 변수를 이용하여 근로자 집단을 구성

- 근로자 집단별 전체 개체수(A)와 소득이 관측된 개체수(B)를 구하고 무등록 조정 개체수(A/B)를 계산한 후 소득이 있는 개체에 가중치로 적용
- 표본 가중치 적용 : 표본으로 입수되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에는 표본설계 과정에서 산정된 설계 가중치에 표본추출틀의 변화를 사후보정하여 적용
 - 표본설계 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 원행정자료를 표본추출틀로 이용하므로 일자리 DB 확정 후 변화된 일용근로자 명부와 기업체 항목 정보를 이용하여 보완 필요
- 모수 추정 :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소득, 중위소득, 소득구간의 비율 등 모수 추정
 - 평균소득 : 소득액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한 후 가중치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
 - 중위소득 : 소득액 순으로 정렬한 후 가중치의 누적합이 전체의 절반이 되는 지점에서 양쪽에 있는 소득액을 평균하여 계산
 - 소득구간의 비율 :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개체의 가중치 합이 전체의 가중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

2. 결과의 적절성

① 작성 과정에서의 검증

- 자료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셋별로 레코드 수나 기술통계량을 기록하여 처리 및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처리, 중복발생 등을 점검
 - 복수 자료를 연계할 때 결과 데이터셋에서 레코드 수가 증가하는지 검증
 - 개체식별자를 기준으로 중복 정리가 되어있는 두 자료를 연계하는 경우 결과 데이터셋의 레코드 수는 변화가 없는 것이 일반적
 - 생성된 데이터셋의 레코드 수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시계열 안정성 확인
 - 일자리 수, 소득액 등 통계 산출 대상이 되는 항목은 자료 처리 과정에서 집계하여 오처리나 산정 방식의 오류가 있는지 점검
- 근로자 DB에서 집계한 일자리 수와 기업체 항목 테이블에서 집계한 일자리 수는 동일 대상을 다른 관점에서 본 것으로, 그 값이 일치해야함을 이용하여 내적 정합성 검증

② 최종 산출통계에 대한 검증

- 최종 결과 : 연도별로 비교하여 시계열적으로 안정됨을 확인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 다른 관련 통계들과 비교하여 외적 정합성을 검증
- 일자리행정통계와 경제활동인구조사(취업자)와의 비교를 통합 검증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X_1 만 명)	
취약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노점상·행상 등)·특수형태근로자 중 행정자료에 미가입·미등록자	일자리행정통계 일자리 (X_2 만 개) (행정자료에 가입·등록된 일자리)

- T년 기준 일자리는 총 X_2 만 개로, 동년 취업자 X_1 만 명보다 ($X_1 - X_2$)만개 적음
- 조사방식, 조사대상 및 산정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통계치가 서로 상이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약 3만 5천 가구를 표본조사하여 가구원이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에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 1명을 산정
 - 일자리 통계는 사회보험·소득세·부가가치세 중 한 개 이상 신고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일한 일수만큼(예. 300/365일)을 일자리 수로 산정
 - 따라서 일자리행정통계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취약근로자나 무급가족종사자, 소규모 자영업자 및 영농 자영자, 특수형태근로자(일부는 포함) 등이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일자리 증감은 T년에 ΔX_2 만 개가 증가하여 취업자 증가(ΔX_1 만 개)와 비슷한 규모 및 추세를 보임

Ⅵ.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① 주요 분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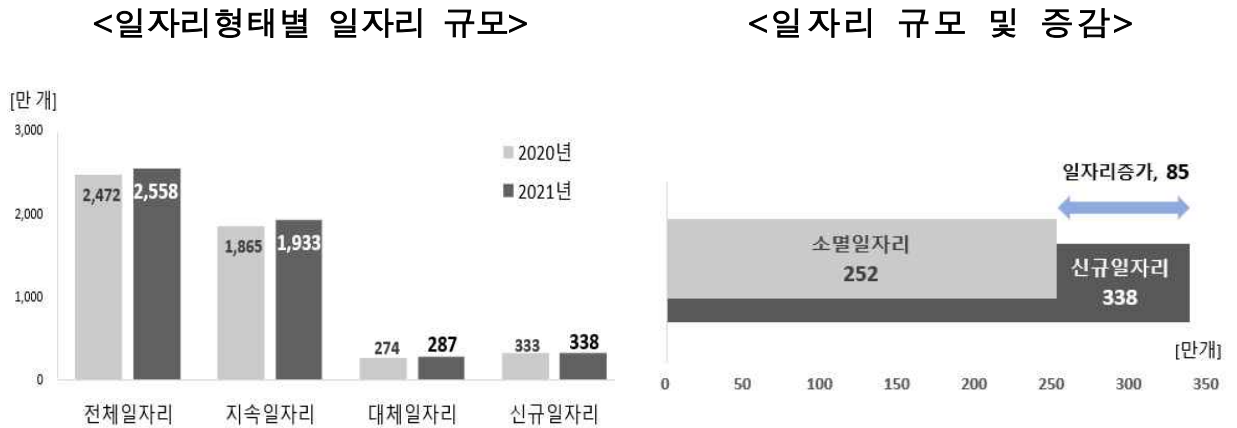
종류	분류명	분류값
근로자 관련 분류	성	①남자 ②여자
	연령	①19세 이하, ②20~24세, ③25~29세, ④30~34세, ⑤35~39세, ⑥40~44세, ⑦45~49세, ⑧50~54세, ⑨55~59세, ⑩60~64세, ⑪65세 이상
	근속기간	①1년 미만, ②1~2년 미만, ③2~3년 미만, ④3~5년 미만, ⑤5~10년 미만, ⑥10~20년 미만, ⑦20년 이상
	종사상지위	①임금근로 일자리 ②비임금근로 일자리
	소득구분 (소득편)	①85만 원 미만 ②85~150만 원 미만, ③150~250만 원 미만, ④250~350만 원 미만, ⑤350~450만 원 미만, ⑥450~550만 원 미만, ⑦550~650만 원 미만, ⑧650~800만 원 미만, ⑨800~1000만 원 미만, ⑩1000만 원 이상
기업체 관련 분류	기업종류	①회사법인, ②회사이외법인, ③정부·기타단체, ④개인기업체
	종사자규모	①1~4명, ②5~9명, ③10~29명, ④30~49명, ⑤50~99명, ⑥100~199명, ⑦200~299명, ⑧300~999명, ⑨1000명 이상
	산업분류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1개 대분류 및 76개 중분류) ※단, 소득편은 대분류 수준으로 작성
	영리구분	①영리기업, ②비영리기업
	기업규모	①대기업, ②중소기업
	공공부문 (공공부문편)	(일반정부) ①중앙정부, ②지방정부, ③사회보장기금, (공기업) ④비금융공기업, ⑤금융공기업
	정부기능 (공공부문편)	①일반 공공행정, ②국방, ③공공질서 및 안전, ④경제활동, ⑤환경보호, ⑥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② 통계 공표의 적정성

- 전수 통계인 일자리통계 및 공공부문편은 모수를 추정하지 않으므로 추정의 적정성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으며 통계 결과 공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통계와 비교하거나 시계열 안정성을 점검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
- 소득편은 4대 사회보험에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전수총과 그렇지 않은 일용근로자 등의 표본총으로 구성
 - 전수총은 항목 결측에 대해 무등록 조정 가중치를 적용하고 표본총에 대해서는 설계 및 사후 조정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모수를 추정

- 일용근로자 각각에 대해 표본 설계 시 산업분류와 종사자규모를 층화변수로 사용
- 최종적인 모수 추정에서 산업대분류 × 종사자규모별 CV(Coeff of Variation)를 구한 결과 안정적인 값이 도출
- 「가구소득 통계에 관한 핸드북」(UN, 2011)에서는 25% 이하의 CV를 지닌 추정치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

③ 주요 통계표 및 그래프



<일자리형태별 일자리 규모 및 증감>

(단위: 만개, %)

연도	일자리형태별 일자리수					일자리 증감 (신규-소멸)
	전체	지속	대체	신규	소멸	
2021년 (구성비)	2,558 (100.0)	1,933 (75.6)	287 (11.2)	338 (13.2)	252	85
2020년 (구성비)	2,472 (100.0)	1,865 (75.4)	274 (11.1)	333 (13.5)	263	71
증감 (증감률)	85 (3.5)	68 (3.6)	13 (4.7)	4 (1.3)	-10 (-3.9)	-

④ 통계 이용 시 유의사항

- (작성 제외) 사회보험에 미가입하고 근로소득도 미신고한 근로자의 일자리는 포함되지 않았고, 비임금근로 일자리에 무급가족종사자와 농림어업 생산활동 경영인이 점유한 일자리가 제외
- (일자리 산정) 작성기준이 연간이므로 연중 근로자 교체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중 근로한 기간을 환산하여 일자리 수를 산정
※ 예를 들어 1년간 3개월만 일한 경우의 일자리는 0.25개로 계산
- (산업분류)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였으며, 기업이 복수의 산업 활동을 하는 경우는 주된 산업 활동을 기준으로 작성
- (기업규모) 영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17.10.17. 개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대·중소기업을 분류하고, 비영리기업은 종사자규모별 통계를 제공

- (기업 특성별 일자리 증감*) Y년의 기업 특성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지난 1년 동안 기업 특성이 변경**된 경우 전년 대비 증감과는 차이

* 신규일자리-소멸일자리

** 예를 들어 개인기업체였던 A사가 Y년에 회사법인으로 전환되었거나, 중소기업이었던 B사가 Y년에 대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등입니다.

-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통계표 내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통계작성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① 통계작성 기준시점

- 일자리행정통계 : 대상년도 연간(1.1~12.31.)의 일자리
- 소득편 : 대상년도 12월에 일자리를 차지했던 근로자
- 공공부문편 : 대상년도 12월에 존재했던 일자리

② 통계공표 시기

- 일자리행정통계 : 대상년도 익년의 12월로, 약 12개월 시차
- 소득편 : 대상년도 후년의 1월로, 13개월 시차
- 공공부문편 : 대상년도 후년의 2월로, 14개월 시차

2-2. 공표일정

□ 사전 공표일정 공개방법

-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자리행정통계의 공표일정을 공표예정 연도의 초에 게시
- 사전예고 주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의 <새소식>의 “보도계획” 메뉴에 게시

3. 비교성 및 일관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개념 및 분류기준의 동일 적용 여부

- 작성 대상 : 2012년 공표 시 일용 외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나 2015년 기준 통계부터는 신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일용 및 비임금 근로자를 포괄하여 작성
 - 또한 2017년 기준 통계부터는 기존에 12월 기준 일자리만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연간 일자리를 모두 포괄하는 구조통계로 전환
 - 소득편 및 공공부문편은 공표 이래로 개념 및 분류 기준 관련하여 변경 사항 없음
- 분류 기준 : 일부 항목의 작성 구간을 세분화 하여 추가 작성

< 분류 세분화 내용 >

항목	2017년 기준 통계 이전	2017년 기준 통계 이후
근로자 연령 구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 , "60세 이상"으로 구간을 5세 단위로 세분
근로자 근속기간	"1년 미만", " 1~3년 ", "3~5년", "5~10년", "10년~20년", "20년 이상"	"1년 미만", " 1~2년 ", " 2~3년 ", "3~5년", ..., "20년 이상"으로 기존 "1~3년" 구간을 세분
기업체 산업분류	산업대분류(21개)	산업중분류까지 통계작성 세분

3-2. 시계열 비교성

□ 시계열 단절 여부와 발생 원인

- 행정자료 추가 활용 및 근로자 포괄 범위 확대에 따라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였는데, 과거 시점의 행정자료를 입수하는 것은 불가하여 과거 통계는 제공 중지한 후 소급 작성이 가능한 시점인 `16년 이후 통계부터 작성·공표
 - 2015년 기준 통계 이전 : 12월에 존재한 일용 외 임금근로 일자리만 포괄 → 중지
 - 2017년 기준 통계 이전 : 12월에 존재한 모든 임금·비임금근로자 포괄 → 중지
 - 현재 : 연간에 존재한 모든 임금·비임금근로자 포괄, 2016년 기준 통계 소급 작성
- 산업분류는 2017년 기준 통계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였으며 2016년 기준 통계에도 적용하여 소급 작성하였으므로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지 않음

3-3. 국가간 비교성

□ 유사 목적의 외국 통계

○ 참고 가능한 해외 사례

- 사회보장제도가 일찍 발달한 북유럽(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은 전자정부 수준이 높고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개인식별번호 체계가 존재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이 발달
- 북유럽국가들은 컴퓨터 기반 행정이 실시되던 60년대부터 행정자료를 통계 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덴마크는 1981년 세계 최초로 행정자료 기반 인구총조사를 실시
- 뉴질랜드 역시 전자정부가 발달해있고 통계작성기관이 국세자료 등 행정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뉴질랜드의 LEED(Linked Employer-Employee Data)

- (정의) 고용인 및 피고용인의 정보가 통합된 행정데이터 집합으로써 전수자료
- (목적) 노동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슈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
- (대상) 국세청에 등록된 15세 이상의 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 (주요지표) 임금근로일자리, 비임금근로일자리
- (생산주기) 분기별 ('99. 2분기~)
- (생산방법) 사업체명부(BF, 조사자료)와 과세자료(행정자료)를 통합하여 생산

<자료별 식별가능 항목>

자료명	식별가능 항목
사업체명부 (Business Frame)	사업체 IRD번호, 사업체명, 주소, 주사업, 산업, 부문(민간/공공), 해외지점소유, 지리적 단위 사업체의 수 및 피고용인 수, 소유구조 등
과세자료 (EMS 및 소득자료)	사업체 IRD번호, 고용인의 성명 및 IRD번호, 피고용인의 성명 및 IRD번호, 최종환급일자, 개별 피고용인의 과세 및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신입일 및 퇴직일, 세금납부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

- 국세청으로부터 월별로 EMS(Employer Monthly Schedule), 소득 세부내역 등을 입수
- * 뉴질랜드 통계청과 국세청은 과세법(1994) section 81(4)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을 위한 과세자료 전송을 양 기관 간 합의

－ 생산 통계

- 뉴질랜드 통계청은 LEED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현황, 이직률, 평균소득 및 중위소득 등의 통계를 생산하여 산업 및 부문별 일자리 및 고용자 흐름 파악 등에 활용
- 현재시점 기준으로 가장 근접한 분기가 조사대상분기이며, 조사대상분기의 중간 달 15일이 조사기준시점임

－ (자료처리과정) 과세자료 입수 → 자료정화 → 사업체명부와 통합 → 통계생산 → 공표

○ 작성 방법 측면에서 일자리행정통계와 뉴질랜드의 LEED(Linked Employer-Employee Data)는 유사성이 높으나 세부적인 지표 산정 방법, 작성 기준 시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음

- － 일자리 산정 시 일자리행정통계에서는 FTE 방식으로, 뉴질랜드 LEED는 Headcount 방식을 채택
- － 작성 기준시점이 일자리행정통계는 연중 존재하는 일자리이나 LEED는 각 분기별 중간 달의 15일에 존재하는 일자리

< LEED를 활용하여 생성하는 주요통계 >

주요 통계	내용	활용 분야
일자리 현황	조사기준시점 기준 일자리 현황	경기활동지표
신규 채용 수	전 조사대상분기 이후 신규채용된 피고용인 수	산업별.지역별.연령별.성별 근로자 현황
퇴직자 현황	전 조사대상분기 이후 퇴직한 피고용인 수	-
이직률	총 신규채용과 퇴직자 평균에 대한 조사대상분기와 직전분기 내 총 고용평균의 비율	고용 안정성 측정, 연령/성별 이직률 현황
일자리 창출력	직전 조사기준시점 이래로 사업확장 또는 창업으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 수	산업.부문.지역별 일자리 창출/감소 현황
일자리 감소율	직전 조사기준시점 이래로 사업 축소 및 폐업으로 인해 감소한 일자리 수	사업체 규모별 등 일자리 창출력/감소율 파악
평균·중위소득	조사대상분기 내 현존하는 모든 일자리 소득의 평균 및 중위값(단, 일부 파트타임직 소득은 제외)	최상 및 최저 평균소득.중앙값을 가지는 산업이나 지역 분석

○ 기타 해외 통계

국가	통계명	주요지표	행정자료
덴마크	Register-based labour force statistics	일자리, 통근자, 소지역	인구등록부, 사업체 과세자료
스웨덴	Labour statistics based on administrative sources	일자리, 산업분류, 소지역	직업등록부, 취업등록부

○ 공공부문편과 관련하여 OECD는 2년 주기로 국가별 공공부문 통계 자료를 수집 및 발표하고 있으며, '13년은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괄하여 발표하였다가 '15년에는 다시 일반정부만 대상으로 발표

- 그러나 국가 간 공공부문 포괄범위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 OECD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 OECD는 2년 주기로 공공부문* 전체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를 발표함

* '11년 기준은 일반정부만, '13년 기준은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괄, '15년 기준은 다시 일반정부만 대상으로 발표

< 주요 쟁점별 포괄범위 비교 >

주요 쟁점	(우리나라) 공공부문편	해외 사례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재단 자율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 미포함	·프랑스, 영국 등은 국가와 계약을 맺은 사립학교를 일반정부로 분류 ·스웨덴, 일본, 캐나다 등은 학교 자율성을 감안하여 가계봉사비영리단체로 분류
징병제 국가의 사병	·의무복무중인 사병은 경제활동인구나 취업자로 보지 않음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은 사병을 공공부문에 포함 ·그리스 등은 사병을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

- OECD 평균은 18.1%이고, 노르웨이는 30.0%, 프랑스는 21.4%로 평균을 상회한 반면 한국은 7.6%로 일본(5.9%)에 이어 하위 2번째 수준

- 공공부문편은 일반정부의 정부기능분류(COFOG)별, 산업대분류별(21개)로 구분하여 일자리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OECD 주요국들은 정부기능분류를 집계하지 않음

< OECD 국가별 전체 취업자에 대한 공공부문 취업자의 비율 >

	2007	2009	2015		2007	2009	2015
NOR	29.0	29.3	30.0	ESP	13.4	14.8	15.7
DNK	28.3	29.4	29.1	USA	15.9	16.7	15.3
SWE	30.3	29.4	28.6	PRT	14.5	15.0	15.2
FIN	24.6	25.0	24.9	IRL	14.6	15.8	15.0
EST	20.7	23.7	23.0	ITA	14.3	14.3	13.6
HUN	18.8	19.6	21.9	NLD	13.6	13.8	12.8
FRA	21.8	21.9	21.4	TUR	13.1	13.1	12.4
LVA	19.5	21.7	20.1	LUX	12.0	12.1	12.4
ISR	22.6	21.9	20.0	DEU	11.3	11.3	10.6
SVK	19.4	18.9	19.4	CHE			9.9
BEL	18.5	18.8	18.4	KOR			7.6
CAN	17.9	18.7	18.2	JPN	6.1	6.1	5.9
GRC	18.0	17.6	18.0				
SVN	15.4	15.9	17.4	LTU	23.3	24.8	22.8
GBR	19.2	19.6	16.4	CRI			11.2
CZE	13.5	13.5	16.2				
AUT	16.4	16.5	15.9	OECD	17.9	18.3	18.1

3-4.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① 일자리행정통계와 국내 유사 통계 비교

구분	일자리행정통계	경제활동 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사업체노동력 조사
목적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성·연령별, 근속기간별, 기업체규모별, 산업분류별 일자리 통계를 제공	경제활동 (취업, 실업 등)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여 고용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자료 제공	지역별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 제공	노동수요자(사업체) 관점에서 고용, 근로 실태를 조사하여 고용노동정책의 기초 자료 활용 및 경기 지표 생산
조사 대상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 사회보험·소득세·부가가치세 중 한 개 이상 신고한 자가 점유한 일자리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군인,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근로자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제외) *근로실태는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작성 방법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전수)	면접 및 인터넷조사 (표본)	면접 및 인터넷조사 (표본)	면접 및 우편조사 (표본)
주요 항목	-인적항목 :성, 연령, 근속기간, 종사상지위, 소득 -기업체항목 :기업종류, 기업규모, 종사자규모, 산업 -일자리형태 :지속, 대체, 신규(기업체 생성, 사업확장), 소멸(기업체 소멸, 사업축소), 증감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수, 실업자수, 비경제활동인구수, 성, 연령, 학력, 전국 및 17개 시도, 임금근로자 임금* 등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전국 및 시도, 시군,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수, 실업자수, 비경제활동인구수, 성, 연령, 학력 등	임금, 근로시간, 종사자수, 입·이직자수, 빈 일자리수
작성 대상 시점	-일자리편: 연중 -임금근로소득편: 매년 12월 -공공부문편: 매년 12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7일간)	4.10월 기준 15일이 포함된 1주(7일간)	매월
공표 주기 /시점	일자리편 익년12월, 임금근로소득편 익년 1월, 공공부문편 익년 2월	매월/익월 중순	반기(4.10월)/6개월 후	매월/익월 *근로실태는 익월 공표
작성 기관	통계청	통계청	통계청	고용노동부
장점	-일자리 변화(일자리 신규·소멸, 입·퇴직에 의한 대체 등)를 파악할 수 있음 -근로자와 기업체를 종합하여 볼 수 있음	-사업장이 없는 근로자도 조사하므로 근로자의 총규모도 파악 가능 -가구조사의 장점인 성별, 연령, 학력 등 개인정보 파악할 수 있음		-사업체조사의 장점인 근로시간, 산업 등 사업체정보와 빈일자리 정보 파악이 가능함
단점	사회보험, 국세자료 등 행정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종사자는 알 수 없음	가구단위의 조사이므로 사업체 정보의 불확실성이 존재함		성별, 연령, 학력 등 개인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음

② 일자리행정통계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차이

< 일자리행정통계(일자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취업자) 비교 >
(단위: 만 개, 만 명)

		일자리 수(A)	취업자 수(B)	차이(B-A)
일자리(취업자) 수		A	B	B-A
전년 대비 증감		ΔA	ΔB	$\Delta B - \Delta A$
종사자 지위별	임금근로자	A_1	B_1	$B_1 - A_1$
	전년 대비 증감	ΔA_1	ΔB_1	$\Delta B_1 - \Delta A_1$
	비임금근로자	A_2	B_2	$B_2 - A_2$
	전년 대비 증감	ΔA_2	ΔB_2	$\Delta B_2 - \Delta A_2$

○ 조사방식, 산정방법, 미가입 일자리 등의 요인에 의해서 차이 발생

- 자세한 사항은 『V. 통계처리 및 분석』의 [2. 결과의 적절성]편 참조

4. 접근성 및 명확성

4-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공표 방법

○ 보도자료 제공 : 통계청 홈페이지>새소식>보도자료 게시

○ 통계자료 제공 :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4-2. 연락처 정보

☐ 통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

○ 연락처 : 042-481-3656

4-3. 통계 설명자료 제공

☐ 통계설명자료 게시

○ 통계청 통계설명DB(<http://meta.narnstat.kr>)에서 통계설명자료 제공

5. 비밀보호 및 보안

5-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통계법」은 통계자료의 수집·처리·작성·보관 과정 등 전반에 대해 비밀보호 의무(동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와 위반 시 벌금, 과태료 등 처벌(동법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을 규정하여 행정자료의 정보보호 의무를 명시
 - 또한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입수·보관·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개인정보보호 장치 마련
-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보 보호를 위하여 외부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용 업무망을 설치하고, 원격서버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 사용자의 행정자료 접근은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시스템과 전용통신장비로 연결하여 인터넷이 차단된 폐쇄망 내에서 가능
- 통계청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DB 구축·관리
 - 주민등록번호는 자료입수 단계에서부터 I-PIN을 이용하여 역변환이 불가능한 64자리로 암호화하여 입수
 - 입수한 암호화 번호를 재차 통계목적용 가상번호(개인대체식별번호)로 변환

5-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은 통계적 처리기법에 따라 암호화된 번호로 대체·관리되고,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시에는 암호화된 식별정보를 다시 임의번호로 전환하여 제공하므로 개인 식별 가능성을 완전 배제

5-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행정자료의 열람, 처리 및 가공 등의 자료처리는 원격분석시스템내의 서버용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만이 해당 자료에 대해 접근 가능토록 제한됨
- 일반적으로 통계법 명시된 비밀보호 의무,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를 따름

Ⅶ.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담당부서 및 인력

- 담당부서 :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
- 담당인력 : 과장, 5급(1명), 6급이하(6명)

2. 자료처리 시스템

☐ 자료입력, 처리, 집계, 추정, 분석 등의 시스템 전산장비

- 원격분석시스템 : 서버용 SAS 프로그램(SAS Enterprise Guide 4.3)
- 자료제공시스템 :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IS), 메타관리시스템

3. 기타

☐ 행정자료를 활용한 일자리행정통계 작성으로 세분화된 통계 생산의 기반 마련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를 포괄하는 일자리행정통계(기업체와 종사자 정보를 연계한 전수 자료)를 작성하여, 정책 대상 계층, 기업체 유형별로 세분화된 분석이 가능
- 또한 공공기관의 행정자료(전수)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통계조사 없이 작성하고, 다른 행정자료 등과 연계하여 파생 통계로 확장 가능한 기초자료임

Ⅷ. 참고문헌

1.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 공공부문 포괄범위, 일반정부의 정부기능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 소재 인터넷주소: <http://unstats.un.org>

2. 동일통계 외국자료

☐ **뉴질랜드: Linked Employer - Employee Data (LEED)**

- 보고서
 - LEED annual technical notes, LEED quarterly technical notes
 - Guide to Interpreting the LEED data
 - Person-Level Statistics Using Linked Employer-Employee Data
- 보고서 소재 인터넷주소: <http://archive.stats.govt.nz>
- 공표자료: Last releases, Previous releases
 - ※ 통계표 소재 인터넷주소: <http://nzdotstat.stats.govt.nz/>

☐ **덴마크: Register-based labour force statistics (RAS)**

- 보고서: Documentation of statistics for Register-Based Labour Force Statistics 2016
- 소재 인터넷주소: <https://www.dst.dk/en/Statistik>
- 공표자료(통계표): <https://www.statbank.dk>

☐ 스웨덴: Labour statistics based on administrative sources

○ 소재 인터넷주소: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

○ 공표자료: Labour statistics and Gross pay based on administrative sources 등

※ 통계표 소재 인터넷주소: <http://www.statistikdatabasen.scb.se>

☐ 북유럽의 행정통계를 비교·분석한 보고서

○ Register-based statistics in the Nordic countries(united nations, 2007)

3. 기타 문헌

☐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David, Haltiwanger and Schuh, 1996)

☐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관한 연구』 (윤윤규, 고영우, 2009)

☐ 『Surveys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An ILO manual on concepts and method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Ralf Hussmanns, Farhad Mehran and Vijay Verma, 2013)

- 소재 인터넷주소: <http://ilo.org>

☐ 『Eurostat-OECD Manual on Business Demography Statistics』
(European commission, 2007)

- 소재 인터넷주소: <http://ec.europa.eu>